

사회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위법 감사 발표 임박

광주시 환경보전 의지 시험대에

업자는 공사 강행... 주민들 "잘못된 허가 바로잡아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련 법률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소 사례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함으로써 행정 지연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는 연접해

지어진 건축물의 합산 연면적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 사실상 이번 건축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남구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연접해 지어지고 있는 총 세 가지 종류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사업주체와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제시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009년 8~11월 사이 모두 내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가 이뤄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 측은 또 다른 국

토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사업주체가 모두 달라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특별감사 진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이날 현재까지 1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돼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의 취지는 개발이 아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주변 환경 보전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과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달라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온통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득 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명시된 연접 규정은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조만간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북구의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북구청 소속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건축사 등 2명이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 수화통역센터 안보이네

설치율 전국 꼴찌... 10개군은 개설조차 안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전남지역 수화통역센터 설치율이 전국 꼴찌라는 조사결과 나왔다.

목포경찰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수화통역센터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 96.8%, 충남 93.8%, 강원 88.9%, 경북 87.0%, 경남 83.3%, 전북 78.6%, 충북 66.7%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전남은 54.5%로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된 지역인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화통역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곡성·구례·담양·신안·영암·완도·장성·

장흥·함평·화순군 등 10개 자치단체는 아직 개설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서는 "수화통역센터 설치율이 청각언어장애인 인권보장 순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무척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센터 설치 운영비가 연간 1억원 정도인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인 1만 8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000여명은 수화 통역이 필요하다고 경찰서는 설명했다.

전남지역 수화통역센터는 지난 1998년 전남분부를 시작으로 2003년 순천센터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에 설치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나원침 (8411) 김중두



만취 상태 버스 기사 위협 여수경찰, 40대 영장 신청

여수경찰은 6일 만취상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운전을 방해한 최모(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 앞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기사 이모(37)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직접 운전하겠다"며 차를 기어올려 운전대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시내버스를 타려는데 문을 닫았다며 이씨에게 욕설하고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20여명이나 있어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최씨가 음주 폭력 행위를 수차례 저질러온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술만 먹으면 동네 공포 분위기 조성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동네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 40대 '주폭'이 검정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임모(42)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 8명을 찾아가 목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주폭'으로 변했던 임씨는 노인이나 부녀자 등 약자만 골라 괴롭혀 온 것으로 판명.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성폭행 강도 잡아 유전자 감식 알고보니 상습 성폭행범

광주북부경찰은 6일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유모(51)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의 한 주택에 사는 A(여·34)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달 2일 북구 운암동에 사는 강도사건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혀 유전자 감식결과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유씨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2003년~2006년 광주에서 발생한 3건의 강간사건 피의자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안경찰도 성폭행 혐의로 13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귀가 중인 여고생 2명을 성폭행한 강도(34)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에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 가던 A(17)·B(17)양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음악에 맞춰... 생활체조 신난다

6일 광주시 북구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제12회 노인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사회적 비판과 관련, 법원이 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받은 서울고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명명하므로 범칙주의 원리, 개인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뿐 아니라 명확한 규정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13년만 선고했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0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올해 4월16일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연희뉴스

'장자연 편지' 위조 30대 추가 기소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6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씨는 다른 강력범죄로 수감중이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점검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편지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탄원서에 '거짓', '왜

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에서와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08년 8월에 작성됐다는 편지가 텔레트 최진실씨 사망(2008년 10월)을 전제해 한 내용이 있고, 편지봉투의 소인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전씨는 수십 차례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으며 이 편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접촉사고에 드러누운 목포 개인택시 기사들

허위 입원 보험금 행진 24명 입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M(59)씨 등 목포지역 개인택시기사 2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5년 5월 순순계 목포시 옥암동 A수퍼 앞 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목포의 한 병원에 127일 동안 허위 입

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개인택시 기사들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Hwagwan) for 2012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Features include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Senior successful candidates say!),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2012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starts at Hanbit Gosi Hwagwan!), and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정직 영문소장직(전문)' (7th grade comprehensive class, 9th grade comprehensive class, court secretary, 7th grade certification exam, English document management specialist). Contact: 062)234-0234.